

문화일보 오피니언

기사 게재 일자 : 2013년 05월 16일

프린트 ✉ 알기

<포럼>

견제세력 없는 日 우경화의 함정

박철희/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어느 조직이든 지도자가 표명하는 방향성이 가시화하면 추종하는 무리들은 순응하고 견제세력이 약할 때는 폭주하는 경향마저 나타난다. 지도자와 생각이 같지는 않아도 반대하는 대열에 서려고 하지 않는 게 권력의 생리다. 그런 모습이 요즘 일본에서 보인다. 아베 신조 내각에 맞서야 할 야당은 지리멸렬(支離滅裂)하고 분열돼 있으며, 그나마 영향력 있는 야당은 아베의 응원단 격이다. 견제할 리버럴 세력이 사라진 상태에서 아베는 일방통행 중이다.

4월 21일 아소 다로 부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자 이틀 후에 168명의 여야 정치인이 앞다퉈 신사 참배를 강행했다. 이틀 뒤 아베 총리가 ‘침략에 대한 정의는 학계에서도 국제적으로도 정립된 게 아니다’라고 하자, 자민당 정조회장은 ‘무라야마 담화에 적힌 침략이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한 발 앞서 갔다. 연합국 점령이 끝난 날인 4월 28일 일본 정부 주최로 주권회복일 기념행사를 가진 자리에서 누군가 ‘천황 폐하 만세’를 외치자 일본 총리도 군국주의적 상징 행위에 동참했다.

아베 총리가 군복을 입고 자위대 탱크에 오른 것은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서였다. 5월 5일에는 일본 헌법 제96조를 개정하겠다는 의미를 담아 96번 등 번호를 달고 야구 경기의 시구(始球)를 했다. 5월 12일 아베 총리는 ‘731’이라고 적힌 전투기 조종석에 올라서서 엄지손가락을 올려 보였다. ‘731’이라는 숫자가 생체화학실험을 했던 부대의 명칭이라는 것을 몰랐다면 무지의 소치이고, 단순한 우연의 일치였다 해도 변명할 수 없는 부주의의 결과다.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이 ‘전쟁 때 군인들이 설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위안부 제도가 필요했다’고 말하고 ‘주일 미군도 매춘을 활용해 달라’고 말한 것은 분위기에 편승한 극우적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산케이신문 사설마저 ‘지금 시대에 정치가가 이런 이야기를 공언하는 것은 여성의 존엄을 해치는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아베 총리도 수습에 나섰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위안부 문제로 고통을 겪은 이들과 슬픔을 나눈다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침략 발언에 이은 일련의 발언과 행동이 주변국은 물론 미국의 심기도 건드리자 수위 조절에 나선 것이다.

일본의 우익 정치지도자들에게선 세 가지 빈곤 현상이 발견된다.

첫째, 상상력의 부족이다.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과거사는 없었던 것이라고 부정하고 왜곡하려 한다. 역지사지(易地思之)할 능력이 있다면, 군대위안부 동원에 강제가 있었다는 것을 추론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위안부 문제는 어떻게 해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일본의 이익에 해가 될 것’이라는 전 주일 미국대사의 충고는 지당하다.

둘째, 가치관의 부족이다. 21세기를 사는 정치인들이 여성의 인권, 평화주의의 근간을 이해하지 못하고, 매춘과 군대가 동원한 군대위안부의 본질을 동일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일 뿐 아니라, 인권 존중의 가치관을 가졌는지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셋째, 전략의 부족이다. 아베 내각이 가장 중시하는 동맹국 미국의 고위 관리가 ‘우리의 가치관과 법률에 반한다. 바보같은 생각이다’고까지 말했다. 미 의회 보고서도 ‘우리의 생각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비판하고 있다. 아시아에 등을 돌리고 미국에서도 비판받는다면 유아독존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나마 아베 내각이 지나친 역사 왜곡 및 우익적 인권 비하 발언에 선을 긋고 나선 것은 다행스럽다. 일본 언론들이 비판적인 논조를 싣고 있는 것은 늦은 감은 있지만 바람직하다. 일본이 비판적 자정능력을 상실하지 않은 선진국임을 앞으로도 스스로 증명해 주길 기대한다.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